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서울 중구 정동 22-2 경향신문사 13층 전화 070-7168-9196 이메일 janggrae2015@gmail.com 트위터 @hopelabor

<취재요청>

박근혜 노동시장 개혁 향후 추진계획 발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세대간 상생고용 = 임금피크 = 정규직 월급 빼앗기
원·하청 상생협력 = 임금공유 = 불법 파견업체 도와주기

1. 방역 실패로 대한민국을 메르스 공포에 몰아넣은 박근혜 정권이 노동현장을 비정규직 천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폐쇄되어야 할 불법 파견업체에 정규직 노사가 임금인상분을 지원한 'SK하이닉스 임금공유'를 이용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사내하청을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2. 정부와 언론이 폐쇄해야 할 불법파견업체를 도와준 'SK하이닉스 임금공유'가 마치 정규직과 비정규직 최고의 연대인 것처럼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SK하이닉스가 공생하는 노사관계, 상생하는 기업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이 시대 최고의 애국이라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자율적으로 고통을 분담해서 협력업체 근로자와 성과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 우리 노동개혁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확신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3. 2005년 7월 21일 대전지방법노동청은 하이닉스 청주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적정한 도급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 파견 사업을 행한 것으로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파견 근로자 사용이 제한된 반도체 제조업의 보진 업무 등에 근로자를 파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지방법원까지 최근 제조업 사내하청 판결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사내하청 노동자 4000명은 정규직이 '임금 공유제'로 시혜를 베풀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용을 금지해야 할 대상이고, 도와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대상입니다.
4.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혁 핵심은 청년과 장년,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이간질하면서 마치 대기업 정규직노조가 노동문제의 주범인 것처럼 만들고, 이를 통해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 임금, 노동조건을 하락시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 일자리를 늘리라고 했더니,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깎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겠다는 것입니다. 재벌들은 정규직 월급 깎아도 신규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벌 금고에 쌓아놓은 돈을 꺼내면 청년 일자리는 만들어집니다.
5. 박근혜 정부가 6월 17일 오전 11시30분 노동시장 개혁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합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대책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신규채용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 임금을 깎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불법파견을 합법화하는 대책입니다. 세대간 상생고용은 임금피크제로 정규직 임금 깎아 기업들 뒷돈을 챙기는 정책이고, 원하청 상생협력은 임금공유제를 확산하는 것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불법파견 업체를 합법화하는 대책입니다. 이에 대해 장그래살리기 운동본부는 아래와 같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정규직 월급 깎고 불법파견 은폐하고 비정규직 양산하는 박근혜 노동개혁 규탄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6월 17일(수) 12:30

- 장소 : 정부종합청사 정문

- 순서

여는 말 : 권영국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공동본부장

세대간 상생고용 규탄(1) 임금피크제 : 오세연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세대간 상생고용 규탄(2) 청년일자리 : 양효영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원하청 상생협력 규탄-불법파견 은폐 : 양경수 금속노조 기아자동차화성사내하청분회 분회장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구 : 김영수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지부장

‘쉬운 해고’ 취업규칙 개악 규탄 : 박성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부지회장

정부 정책 종합 비판 : 윤지영 변호사

- 문의 : 윤지영 변호사(010-4568-6171) 박점규 대변인(010-9664-9957)

<기자회견문>

말뿐인 상생과 개혁을 멈춰라!

갈등과 개악을 조장하는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을 규탄한다!

1. 오늘 발표는 폐기되었어야 할 정책을 재탕하여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는 오늘(6/17),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1차)을 발표하였다. 오늘 발표한 추진 방안은 지난 해 말 발표한 노동시장구조개악안의 재탕에 불과하다.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노사정 합의 실패와 거센 여론에 부딪혀 진작에 폐기되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상당 부분 의견 접근’, ‘공감대 형성’과 같은 수사로 포장하면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동시에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사회적 대화’에는 어떠한 진정성도 없다. 정부가 통제 가능한 공공기관을 첫 도입대상으로 지목하고 자신의 정책을 강제하고 있으며, 실패한 노사정 합의를 노사정에서 의견이 접근했다고 포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행태는 사회적 대화와 합의보다는 자의적인 판단과 일방적인 강제에 가깝다.

2. 청/장년 상생고용으로 포장된 세대 간 갈등 부추기기와 임금 저하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청년 고용’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세대 간’ 혹은 ‘청·장년 간’ 상생고용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정책이 모든 세대, 모든 노동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새로울 것이 전혀 없다. 지난 해 말부터 단편적으로 제기되던 정부개악안의 여러 내용이 최근 ‘청년고용’이라는 프레임으로 재구성되었을 뿐이다. 청년고용이란 레토릭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연말을 거쳐 실패한 노사정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유노조/무노조의 대립구도를 통해 재벌 일방에 대한 편들어주지 않았던 자신의 의도를 은폐하고, 정규직노동자·여성 노동조합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구했다면, 이번 발표에서는 청년을 정부가 제시한 구체적인 제도 변화의 최대 수혜자로 상정함과 동시에, 청년과 중·장년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말하는 정책은 세대 간 대립과 반목을 부추기며, 정부와 재벌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 간에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일 뿐이다.

정부가 청/장년 상생고용으로 내세운 것은 바로 임금피크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에게는 고용을, 중·장년에게는 고용안정을 보장하겠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이를 상생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생을 설득이 아닌 강제의 방식으로 일방추진하고 있으며, 성과주의 확대를 선도하여 민간에 확산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생이 정부에 의해 왜 강제되어야 하는지, 성과주의가 어떻게 상생이 될 수 있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임금피크 대상만큼의 청년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정부가 제시한 사례들을 보면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오히려 신규 채용이 줄거나 그 효과가 미비함이 드러난다. 실제 신규 채용이 늘어난 사업장의 경우에도 임금피크제와 무관하게 노동시간을 감축했기 때문에 발생한 효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로 임금피크제가 노동자들, 특히 청년들에게 좋은 제도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임금피크제는 중·장년에게 임금 삭감의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신규 채용을 하지 않은 책임을 청년이 연장된 중장년에게 돌리는 것에 불과하다. 세대 간의 갈등, 노동자 간의 갈등을 부추기며 제자리 걸음의 일자리를 노동자들끼리 후퇴된 조건으로 나누는 것에 불과하다. 현재 주어진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 아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답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를

강요하고 있다.

3.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상생으로 포장된 비정규직 고착화와 정규직 끌어내리기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도 원하청 상생과 비정규직 보호를 들먹이며 마치 정부의 발표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좋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이전에 발표했던 것과 같은 내용으로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고, 차별을 없애겠다는 명목으로 정규직을 끌어내리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은 앞선 정권에서 상생, 공생, 동반성장이란 명목으로 이미 진행되었던 내용들이다. 그리고 이미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들이다. 앞선 정권들 역시 재벌·대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원하청,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이러한 접근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증명되었다. 재벌·대기업의 이윤 창출 방식인 납품단가후려치기를 통제 하지 않는 이상 정부가 제시한 재벌·대기업 인센티브 정책은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할 뿐이다. 강제력 없는 정책들은 재벌·대기업에게는 어떠한 위협도, 손해도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실패한 정책을 요란하게 떠들어 대는 데에는 그 뒤에 숨은 진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상생이라는 미명하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신분을 고착화하고 정규직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 협력업체, 하청업체, 용역업체 등에 속한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는 대기업, 원청업체, 위탁업체의 사용자 책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 간접고용 노동자는 대기업, 원청업체, 위탁업체로부터 노동조건과 업무를 통제 받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정책도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런데 정부는 “대·중소 및 원·하청 상생”이라는 그럴듯한 말을 통해 대기업, 원청업체, 위탁업체가 져야 할 사용자 책임을 외면한다. 일련의 판결을 통해 제조업 사내하도급은 불법이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사용자라는 점이 확인되었지만 정부는 사내하도급을 합법화하면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해 원청업체는 사용자가 아니다. 다만 이들과 상생해야 한다’고 에둘러 말하는 것이다.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 될 것을 굳이 직종별 표준계약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이 말은 특수고용노동자는 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정부의 입장을 드러낸다. 기간제 노동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지만, 정규직 노동자가 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선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로 2년 넘게 근무한 노동자의 무기직 전환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보다 후퇴하여 선별적으로 무기직 전환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성과에 따른 임금, 노동조건이라는 명목하에 통상임금을 낮추고 임금체계를 개편하며 노동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규직 끌어내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비정규직의 사용은 엄격하게 사유를 제한해야 한다. 정규직의 직접고용이라는 고용의 대원칙을 세우고, 중간착취를 근절함으로써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다양한 고용형태로 은폐된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를 확인하고, 도급으로 위장된 간접고용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 사용자에게는 불·편법적으로 변형된 고용형태의 활용과 그로 인해 취할 수 있는 이득을 차단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없는 정책은 허구에 불과할 뿐이다.

2015. 6. 17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공동대표 권영국 구교현 김민수 박석운 한상균